

광주·전남 정치권,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공조’

국회서 공동 결의문 발표
한전 등 인프라 최적 입지

전남도-국회의원 정책협서
현안 해결 공동 노력 다짐도

전남도와 광주·전남 정치권이 19일 국회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나주 유치를 촉구하며 공동결의문을 발표, 지역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남도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대해 ‘전남 국회의원-전남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어 광주 국회의원들과도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며 한목소리로 유치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김영록 도지사,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지원·이개호·조계원·김문수·권완형 국회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 전남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에 서 공동결의문을 발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노력에 힘을 싣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나주는 안정적 부지 여건, 우수한 정주환경,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 등 세계적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이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촉구’를 위한 공동결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또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구축은 진정한 국가 균형성과 과학기술진흥의 출발점”이라며 “연구시설이 나주에 유치되도록 전남·광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연구시설 조기 구축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나주의 탁월성이 공정·명확하게 평가·반영돼야 한다”며 엄정한 절차를 촉구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대형 국가 연구시설로, 청정에너지 확보와 미래첨단산업 기술자립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말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이날 지역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를 통한 숙원사업 해결 방안을 폭넓게 협의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2026년 국고 확보를 위해 △전남 SOC 사업 국고 지원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S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단지 구축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 센터 유치 등 국비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석유화학·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전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협조를 구했다. 또 △‘인공태양 연구시설’ 에너지 수도 전남 나주 유치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2027학년도 정원 배정 △광양·순천 일원 ‘RE100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대규모 AI 첨단산업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무한 청정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인공태양이다. 세계 주요 빅테크 기업도 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투자와 설비를 확대하는 만큼 나주는 관련 R&D와 연관 산업을 집적할 최적의 입지로서 연구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모 당시, 과기부 장관이 전남의 유치 노력에 감명을 받았으며 후속 대규모 국가연구시설의 전남 자원을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정부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사남권 해상풍력·태양광,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전남을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만들 대단히 좋은 기회”라며 모든 선

정 요건을 가장 잘 충족한 지역이 나주임을 거듭 강조하고,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뜻을 전했다. 국회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위원장은 “석유화학·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RE100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률이 국회 산자위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민주, 권리당원 권한 강화 투표…‘10월 당비 낸 당원’ 165만명 참여

호남 지방선거 겨냥 ‘조직 동원’ 과열될 우려
“당세 편차 보정안 없고 강경파 득세”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에 착수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원 주권’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일각에서는 강경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물론 당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남에서는 권리당원을 선점하기 위한 조직 동원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3가지 안건에 대해 당원들의 찬반을 묻는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하는 규정, 10%를 삭제하고 1대 1로 동등하게 하는 안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지방선거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하는 예비 경선 도입이다. 하지만 호남 일각에서는 예비경선부터 권리당원 100%로 후보를 선출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만만치 않다.

민주당 경선만 통과하면 본선 당선이 유력시되는 지역이기에 경선부터 조직 동원이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호남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원들이 뽑은 후보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자 호남은 민심을 더 높게 반영할 수 있는 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권리당원 신규모집에는 30만장의 당원 가입서류가 접수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별로 당원 동원이 과열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관련 당 경선에서 투표하려면 8월 말까지 입당해야 하며 내년 2월 말 전까지 모두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중북·하위 신청된 당원 서류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현직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우시당에서 열린 제184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군수 입후보 예정자, 광역 의원 출마 예정자 등 전남도당 소속 3명이 불법 당원 모집 혐의가 드러나면서 중앙당 윤리위로 넘겨졌다. 이번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를 등가로 조정하게 되면 이번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결국 권리당원을 열만나 확보했는지가 경선을 좌우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민주당 주요 선거에서는 권리당

원의 표심 즉 ‘당심’이 경선 결과를 좌우해왔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도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55%에 달하며, 당심을 등에 업은 정청래 후보가 당권을 거머쥐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대표 연임을 위해 당원 숫자가 적은 협치 지역을 배려했던 기존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때 대의원 투표에서는 약 47%를 얻어 53%를 기록한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통상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지만, 이번 투표에는 ‘10월 당비를 낸 당원’ 165만명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자신이 승리한 8·2 전당 대회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을 더 많이 포함하기 위해 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정 대표 측은 이번 당원 투표는 의결 목적이 아니라 여론 조사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양림동 선교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시, 학술회의·워크숍·근대 기독교 역사적 가치 조명

광주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독교 선교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20~21일 호남신학대학교 일원에서 ‘한국기독교선교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회의와 워크숍’을 열어 한국 근대 기독교 선교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광주기독교단협의회·한국선교유적연구회(전남)가 주관해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광주 남구와 대구 중구를 비롯한 한국기독교 선교지 보유 8개 지자체(광주 남구,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김제시, 목포·순천시)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학술회의에서는 한국기독교선교지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등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회의의 주제발표는 한국의 기독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향후과제(서만철

한국선교유적연구회장), 광주의 기독교 선교 역사(송현강 한남대학교 교수), 광주 기독교선교유산의 건축학적 특징 연구(전남연구원 한국선교유적연구회장), 광주기독교선교유산의 보존과 세계유산 추진 전략 및 활용(한민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등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송인동 호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광기 전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장, 한규무 광주대학교 교수, 신웅주 조선대학교 교수, 김종원 한국순례길 광주지부장, 주제발표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21일에는 학술회의의 참여자들과 함께 남구 기독교선교유산들을 답사하는 ‘양림기독교선교유산 현장워크숍’이 열린다. 광주시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대구와 ‘달빛동맹’을 확대하고, 8개 지자체와 협력해 한국기독교선교지지의 세계유산 등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 29일 순천서 경제 타운홀미팅

내일까지 정책 제안서 접수

전남도는 오는 29일 동부지역본부에서 경제 타운홀 미팅인 ‘전남 정책대동회 바란(2차)’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21일까지 정책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지난 9월 전남도청에서 개최했던 1차 행사처럼, 강원도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정책 제안자가 직접 만나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열린 토론장으로 마련된다. 전남 정책대동회 바란은 보편적, 공개적, 무제한적 소통을 하기 위해 남녀노소, 거주지역, 주제 범위 제한 없이 내·외

빈 축사와 격려사, 마이크 독점이 없는 ‘3무’를 원칙으로 혁신적 창의와 비판적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지난 1차에는 200여명이 참석해 5시간 동안 제안과 경청이 이어졌으며, 52명이 87건을 제안하는 등 공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산업이나 일자리 등 경제 현안뿐 아니라 교육, 농업, 수산 등 다양한 제안에 대해 전남도는 부서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행사 개최 한 달 내 제안자에게 답변했으며,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제안자에게 답변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

“광주 어린이집 3년간 93곳·원아 4707명 줄어” 박미정 의원 “보육 수요 변화에 재정비 대책 필요”

광주지역 어린이집이 최근 3년간 93곳, 아동 4707명이 줄어드는 등 급격히 감소하면서 보육 수요 변화에 맞춘 재정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사진)은 19일 여성가족국 제3차 추경안 심사에서 “보육은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광주시는 변화한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재정비

하고, 지역 보육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어린이집 현황에 따르면 지역 어린이집은 2023년 878개소, 2024년 828개소, 2025년 10월 기준 785개소로 3년간 총 93곳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반 개설 수는 634개 감소했고, 정원 아동은 4707명 줄었다. 보육교직원도 9114명에서 8388명으로 726명 감소하는 등 광주 보육 현장의 기반이 전반적



으로 축소되고 있다. 보육 수요 감소는 광주시 추경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누리과정보육료는 19억7948만원, 차액보육료는 5억6980만원, 어린이집 급식비는 4억8590만원 등 보육료 및 어린이집운영지원 등 약 37억원이 감액됐다. 또 어린이집 폐원과 이용 아동 감소에 따라, 영아전담 어린이집 1개소 감소로 5억6613만원, 연장반전담교사 감소 4억8916만원, 조리사 인건비 1억7753만원 등 관련 인건비성 예산도 약 25억원 감액됐다. 반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

원 인건비지원 예산은 21억원 증액(국 60%, 시 28%, 구 12%)됐다. 이는 교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교육부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개소수와 재원 아동수 감소는 보육료, 급식비, 안심보육비, 운영비뿐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와 수당 등 보육 관련 전반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미정 의원은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폐원이나 통합을 희망하는 시설을 위한 컨설팅과 정신 지원, 지역별 적정 개소 수 재산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